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03
----------	------

발의연월일 : 2020. 8. 7.

발 의 자 : 최종윤 · 인재근 · 이인영  
김진표 · 박성준 · 김원이  
조승래 · 김경만 · 박홍근  
박상혁 · 김승남 · 한병도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

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훼손 발생 이전의 구조와 기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고려하고,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을 고려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권고, 비용지원 및 환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및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 신설).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환경훼손”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자연환경의 구조 및 기능이 중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

2의3. “자연환경복원”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원래의 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로 되돌리거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자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제2호의3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복원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훼손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연환경의 구조, 기능 및 자연환경훼손이 발생한 이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산·하천·호소(湖沼)·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

성과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자연생태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정보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를 “자연환경복원”으로 한다.

제9조제7호 중 “복원을”을 “복원과 자연환경복원을”로 한다.

제4장의2(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합하고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2.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 결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훼손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하여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⑤ 그 밖에 후보목록의 작성, 비용의 지원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

원사업 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후 모니터링·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4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하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 지

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 추진실적의 평가기준·방법 및 절차, 포상 또는 비용의 차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모니터링의 내용·방법·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한다.

제4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50조제1항 본문 중 “자연환경보전사업”을 각각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의”를 “제45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의”로, “생태계보전협력금중”을 “생태계보전협력금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lt;신    설&gt;</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자연환경 훼손”이란 자연</u> <u>적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자</u> <u>연환경의 구조 및 기능이 중</u> <u>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u> <u>한다.</u>
<u>&lt;신    설&gt;</u>	<u>2의3. “자연환경복원”이란 훼손</u> <u>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u> <u>회복시킬 목적으로 원래의 상</u> <u>태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로</u> <u>되돌리거나 환경 변화를 고려</u> <u>하여 새로운 자연환경을 조성</u> <u>함으로써 그 상태를 유지하고</u> <u>관리하는 것을 말한다.</u>
3. ~ 18. (생    략) <u>&lt;신    설&gt;</u>	3. ~ 18. (현행과 같음) <u>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제</u> <u>2호의3에 따른 자연환경복원</u> <u>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u> <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u> <u>업을 말한다.</u>
<u>&lt;신    설&gt;</u>	<u>제3조의2(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u>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복원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훼손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연환경의 구조, 기능 및 자연환경훼손이 발생한 이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산·하천·호소(湖沼)·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자연생태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정보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  
-----  
-----  
-----  
-----.

<p>1. ~ 3. (생 략)</p> <p>4. <u>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u></p> <p>5. ~ 9. (생 략)</p> <p>② (생 략)</p> <p>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생 략)</p> <p>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u>복원을</u>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p> <p>8. ~ 10.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자연환경복원</u>----- ---</p> <p>5.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복원과 자연환경 복원을</u>----- ---</p> <p>8. ~ 10.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u></p> <p>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u>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합하고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u></p>
-------------------------------------------------------------------------------------------------------------------------------------------------------------------------------------------------------------------------------------------------------------------------------------------------------------------------------------------------------	-----------------------------------------------------------------------------------------------------------------------------------------------------------------------------------------------------------------------------------------------------------------------------------------------------------------------------------------------------------------------------------------------------------------------------------------------------------------------------------------------------------

1.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2.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 결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훼손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하여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

<신 설>

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⑤ 그 밖에 후보목록의 작성, 비용의 지원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후 모니터링·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4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자연환경복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진실적의 보고·평가) ① 자연  
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  
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  
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하거나 자  
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  
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 추진실적의  
평가기준·방법 및 절차, 포상  
또는 비용의 차등지원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신 설>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



	<p><u>관에 의뢰할 수 있다.</u></p> <p><u>⑤ 그 밖에 모니터링의 내용 · 방법 · 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생략)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u>자연환경보전사업</u>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 ----- ----- <u>자연환경복원사업</u>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 ----- ----- ----- -----.

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  
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 14. (생 략)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  
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  
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  
(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  
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  
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  
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2. ~ 14. (현행과 같음)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 지원) ① -----  
-----  
-----  
-----자연환경복원사업-----  
-----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  
-----자연  
환경복원사업-----  
-----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  
-----.

<p>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u>범위안</u>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p>	<p>----- ----- -범위----- ----- ----- -----.</p>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u>자연환경보전사업</u>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 ----- -----<u>자연환경복원사업</u>----- ----- ----- -----.</p>